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0. 12. 29.(화) / 총 9매(본문3, 참고6)	
담당 부서 수도권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남일석, 사무관 공두영, 주무관 유서영 ·☎ (044) 201-3658, 3659	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30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30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

### - 30일 「제4차 수도권정비계획(2021~2040)」 확정·고시 -

□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「제4차 수도권정비계획\*」을 확정·고시하였다고 밝혔다.

\* 수도권 인구·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

□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.

○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·기업·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, 수차례의 지자체·전문가 간담회\* 및 관계부처 사전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다.

\*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연구원 권역별(강원충청·호남·영남) 간담회도 실시

○ 계획안 마련 후에도 공개 토론회\* 개최와 관계기관 의견조회(중앙행정기관, 17개 시·도)도 충실히 실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,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.

\* 11.12(목) 14시, 서울 The-K 호텔(유튜브 생중계), 수도권·비수도권·환경 전문가

□ 이번 계획은 인구·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,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하였다.

①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, 주민 삶의 질, 혁신성장,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“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”으로 제시하였다.

②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,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, 평화경제 벨트, 국제물류·첨단산업 벨트, 스마트 반도체 벨트, 생태 관광·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.

- 이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·하위 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·산업배치 등의 기본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③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고,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.

- (과밀억제권역)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,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.

- (성장관리권역) 남부-북부의 격차를 고려하여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공장 등 관리 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하여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.

- (자연보전권역)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아(96%)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.

④ 공장, 대학, 공공청사, 연수시설,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(공장총량, 대학 입학정원 총량), 권역별·유형별 입지 규제,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,

-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\*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.

\* 택지 조성사업, 공업용지 조성사업, 관광지 조성사업, 도시개발사업 등

⑤ 계획의 집행·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 계획·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,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\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\*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재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('19.12)

□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“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·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·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-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공두영 사무관(☎ 044-201-36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법 제4조에 따라 목표·기본방향, 인구·산업 배치, 권역별 정비, 인구집중유발 시설 및 개발사업 관리, 광역시설 정비, 환경보전, 집행·관리 등으로 구성

**1.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**

□ (계획 개요) 수도권의 인구·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장 의견을 들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(법 제4조)

※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을 공간적 범역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·개발계획 등에 우선

□ (기본방향) 시대정신인 연대·협력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\*과 연계 하여 균형발전·삶의 질·혁신성장·평화경제의 4대 목표 등 방향 제시

\* (수도권 관련내용) 지방과의 상생발전, 주민 삶의 질 향상, 글로벌 경쟁력 확보

○ 수도권-비수도권, 수도권 내, 남북 등 다양한 관계간 연대 추진 및 계획 집행·관리에 대한 중앙정부·지자체간 등 협력 증진

**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**

균형발전

주민 삶의 질

혁신성장

평화경제

□ (중장기 비전) 그간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은 물리적 규제·중앙정부 중심의 경직성 극복을 위해 유연성·협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

○ 균형발전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·지자체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계획을 통해 도시성장을 관리하는 “협력적 성장관리”로 단계적 이행 검토

**< 협력적 성장관리 >**

○ 법에서는 규제범위 등 큰 틀을 정하고, 중앙정부·지자체간 상호협력으로 구체적 지침·규제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성장을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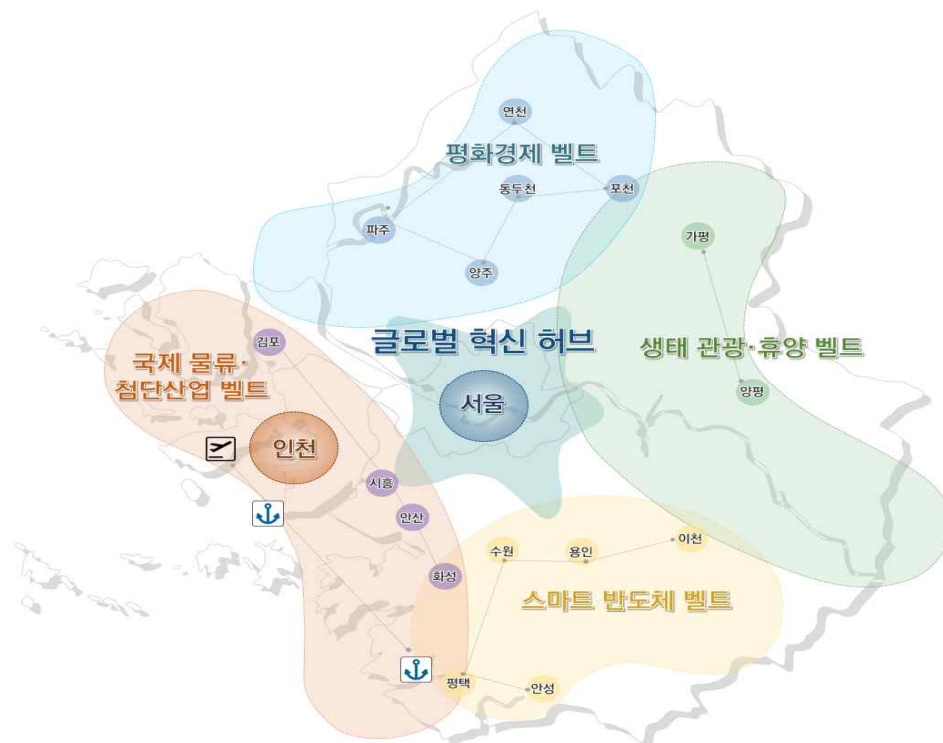
○ 균형발전 성과 및 제도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현재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계획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의 기능 강화

## 2. 인구와 산업의 배치

◆ 특화산업 분포 및 네트워크 분석, 수도권 지자체별 공간계획 및 주요 개발 예정지 검토 등을 통해 수도권 공간구조 구상

- (글로벌 혁신 허브)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역량 확산
- (국제물류·첨단산업 벨트) 인천공항·평택항 등의 국제관문역할을 제고하고, 수도권 남서부·인천의 첨단산업 특화 및 구조 고도화
- (스마트 반도체 벨트) 경기남부에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·지원시설 확충 등 강화
- (평화경제 벨트)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·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 발전 및 종합적 지원 등을 통해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 제고
- (생태 관광·휴양 벨트) 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, 이를 바탕으로 휴양·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

<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상 >



### 3. 권역의 구분과 정비

◆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관리를 추진하고, 권역체제 변경은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 검토

□ (과밀억제권역) 인구밀도 등 측면에서 과밀은 지속되고 있으며, 경기 남부지역 등 주변지역으로 과밀화 현상이 확산중

⇒ 여전한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현행규제를 유지하여 지속 관리\*, 중장기적으로 과밀화 추세를 평가하여 과밀억제권역 조정 검토

\* 서울도 과밀부담금 징수, 서울로의 대학이전 금지 등 현행수준으로 관리지속

□ (성장관리권역) 권역내에서 남부-북부지역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, 신규 공장 절반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지하는 등 여전히 난개발 우려

⇒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\*하도록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\*\*을 운영하고,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주요 난개발 방지 정책과 연계

\* 공업지역 공급물량 북부비중 확대, 추가물량 요건으로 평화경제 사업 명시

\*\* 기존에는 산업단지만 관리하였으나, 산단 외 공업지역까지 포함하여 관리

<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 관리 개편 >



□ (자연보전권역)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(96%)이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하며,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

⇒ 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한 공장총량 배정 등 신규 개별입지 억제 및 기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\* 마련

\*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목적의 경우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 조정 등

※ 상수원·환경에의 영향정도 등 지역특성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 검토

## 4.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 관리

### □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

- (공장) 공장총량제를 개별입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편하고, 공급물량 단계적 축소, 세부 집행지침\* 마련 등을 통해 관리강화
  - \* 난개발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배정계획 수립,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연계 등
- (대학) 교육의 수도권 집중 및 파생되는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 입지규제를 지속하고,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대학총량 조정
- (공공청사) 권역별·유형별 신축·증축·용도변경을 심의 등을 통해 관리하고, 지방이전 가능기관의 경우 신·증축을 엄격히 제한
- (연수시설) 과밀억제권역 입지금지, 성장관리·자연보전권역 심의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방안 검토
- (대형건축물) 과밀부담금 부과를 통해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하고, 중장기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 범위·대상·활용 등 체계개선 검토

< 과밀부담금 부과·징수 현황('20.6월 기준) >

구 분	부과		징수	
	건수	금액(억원)	건수	금액(억원)
'94 ~ '96	84	859	53	147
'97 ~ '05	532	9,580	432	6,120
'06 ~ '20	1,254	18,284	718	15,712
합 계	1,870	28,723	1,203	21,979

### □ 개발사업 관리

- 법적기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한 관리를 지속\*하고, 중장기적으로 심의대상 사업의 유형·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
  - \* 권역지정 취지 및 사업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심의 내실화(심의기준 검토 등)

## 5. 광역시설

- (교통시설) 광역철도망 구축, 도로망 네트워크 강화, 인천·김포공항 및 인천·평택항 시설확충 등 세계적 수준의 교통 인프라 확충
  - 광역버스 노선·BRT 구축사업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, 주요 거점에 체계적인 환승센터 구축 등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확대
  - 대중교통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추진 및 충전인프라 확충, 공항·항만 등에 친환경 시설 도입·운영 등 미래지향적 친환경 교통망 구축
- (물류시설) 거점 물류단지 조성 등 물류인프라 확충, 로봇·IoT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·보급, 친환경 운영 등 그린물류 체계 구축
- (상·하수도시설)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및 관리, 첨단 기술을 통한 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도입,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

## 6. 환경보전

- (대기질) 광역적 대기문제 대응, 핵심배출원 관리 등 대기오염 개선 및 그린뉴딜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적극 감축
- (수질) 완충저류시설 설치, 유해물질 저감 등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및 오염원 관리강화, 수질개선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 확보
- (폐기물)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, 폐기물 수거 안정성 강화, 선별 품질 개선 및 재활용 촉진, 안정적 폐기물처리 기반 조성
- (녹지) 수도권 녹지 연결성 강화, 바람길 확보·폐공간 생태자연화 등 쾌적한 도시공간 관리,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

## 7. 계획의 집행 및 관리

- (집행·관리) 국토부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·배포하고, 관계기관은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(5년 단위) 및 집행실적 제출(매년)
- (평가)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및 관계기관의 소관별 집행실적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



